

올림픽 국비 확보에만 사활 종합발전 전략은 나 몰라라

스포츠산단 시작조차 안 해 관광·지역연계 등 진척 없어 일각 “도정 느슨해져” 지적 일부 공무원 무사안일 현상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도의 역량과 관심이 '경기장 등 대회 관련 시설을 위한 국비확보에 합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직후에는 활발히 거론됐던 올림픽스포츠산단단지, 관광 배후도시, 지역 연계발전 등 '2018평창동계올림픽 비전'이 실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후, 지난해 8월 초 100만㎡ 규모의 올림픽스포츠산단단지 조성을 신규 핵심과제로 포함했다. 이 산단단지는 일반스포츠용품, 스포츠용품 연구·개발(R&D) 분야 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초 10억원을 들여 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6월에는 산업단지 대상지를 선정, 2017년부터는 기업을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계획수립 용역조차 시작되지 않고 있다.

도는 또 수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강원도 종합발전전략'을 수립, 지난 1월 발표했다. 이 종합발전전략에서 도는 2010년 말 30조원이었던 도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2018년 60조원, 2020년에는 70조원으로 늘리

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도는 한동해 항토산업클러스터 조성, 그린바이오 식품클러스터 조성, 외국인 농촌체험관광 특화마을 육성,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식품공장 육성, 설악단오문화권 개발, 종래레저·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원주·강릉·춘천 삼각벨트 구축,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철도역 주변 역세권 개발, 몰(Mall) 오브 코리아 유치, 저탄소 녹색교통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 대부분은 진척이 없다.

평창동계올림픽 비전이 사실상 멈춰 있는 것에는 도가 그동안 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과 3대 현안, 2013년도 국비 확보 등에 집중한 이유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현안에 도 전체가 매달리지 않았다는 면에서 도정 내부에서도 원인이 일어난다. 특히 최근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도정이 느슨해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문순 지사는 자율,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그의 도정 운영방향이 일부 공무원에게서는 무사안일 등으로 변질되려는 현상도 엿보인다.

도는 지난달 20일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지만, 적지 않은 부서는 아직 업무분장도 정확지 않은 등 도정이 내부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 또 최문순 도정 출범 후 평창동계올림픽을 제외한 일반 도정의 무게가 교육과 복지, 문화 등에 쏠리며 다른 분야 공무원은 사기가 저하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이규호기자 hokuy1@kwnews.co.kr

열립니다

2012 강원경제인페스티벌

9월13~14일 정선 하이원리조트 컨퍼런스홀서
강원경제인상 시상 총상금 1억1,000만원 수여

강원도의 성장과 발전을 주도 하는 도내 경제인들을 모십니다. 창간 67주년을 맞은 강원일보 시는 하이원리조트와 공동으로 9월 13일부터 이틀간 하이원리조트 컨퍼런스홀에서 "2012 강원경제인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국내 유명 경제전문가와 다양한 분야의 명사가 참석해 지역 경제인들과 함께 강원 경제를 진단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강원도 대표 기업으로 성장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6회 강원경제인상 시상식도 거행됩니다. 강원경제인상은 엄격한 심사과정을 통해 수상 업체를 선발, 국내 최대 규모인 총 1억1,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합니다. 도내 중소기업인과 경제 유관기관, 자치단체 관계자들의 참여와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9월 13일(오후 2~8시)

◇개회식 및 강원경제인상 시상식

△시상 부문

▽강원경제인대상=트로피 및 상금 5,000만원

▽강원신기술인상=상패 및 상금 2,000만원

▽강원건설인상=상패 및 상금 2,000만원

▽특별상(2명)=상패 및 상금 각각 1,000만원

◇기조 및 특별강연

■ 9월 14일(오전 6시30분~ 오후 2시)

◇조찬강연(오전 8시)

◇강원경제인 친선골프대회

△티오프: 오전 6시30분 △장소: 하이원CC

◇참가신청: 강원일보사 홈페이지(www.kwnews.co.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제출

◇문의: 강원일보사 경제부(033)258-1341~3)

■주 최: 강원일보사·하이원리조트

■후 원: 강원도·정선군·강원지방중소기업청

“혁신도시 신규인력 지역인재 의무채용”

이강후 의원 법안 발의

원주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채용 시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강후(원주을) 의원은 지난 10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신규직원을 채용할 경우 지역학교(초·중·고·대학)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고용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혁신도시 공사와 관련한 공동계약 체결 시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40% 권고에서 60% 의무화로 바꿔 입법했다.

원주 지역은 혁신도시와 관련한 공사에 지역업체 공사참여 비

율이 현재 24%에 불과하고, 관련 조항도 권고사항에 그쳐 강제력을 갖지 못했다.

현재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해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으나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활성화나 고용창출 효과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이강후 의원은 “원주 등 전국 10개 혁신도시 개발이 지역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전국 혁신도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며 “원주민들에게 확실한 실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민원기기자 wanki@

평창 동계올림픽 식수대란 우려

전용 저수지 조성 특별법에 미반영... 지자체 추진 예산 부담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선결조건 중 하나인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이 올림픽 관련 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식수대란'이 우려된다.

12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기간 동안 물 부족 사태를 막기 위해 도가 계획하고 있는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이 지난 9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 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평창동계올림픽특별법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자치단체의 광역지역발전

별회계 예산에서 집행되는 일반 저수지조성사업과 달리,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개최의 필수 시설인 만큼 대회 관련 시설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도가 추정하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대회 기간 동안 필요한 일일 용수량은 생활용수 1만5000t, 하천용수 8000t 등 2만3000t이다.

그러나 현재 평창동계올림픽 주 개최지인 대관령면 지역에 하루에 공급되는 용수량은 4000t에 불과하고, 평창지역 주요 용수 취수원인 송천의 용수량 부족으로 더 이상 용수를 확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는 용수확보를 위해 대관령면 황병산 계곡에 상수도시설 사업비 368억원,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비 462억원 등 총 사업비 830억원을 들여 총 저수량 304만t 규모의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수도시설 사업비 368억원 중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부만 지원하고, 식수전용저수지 사업비 462억원은 자치단체 사업인 만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재정 상태가 열악한 도는 사업 추진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은 1300억원 규모지만 관련 예산의 80%는 18개 시군에서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이고 나머지 20%도 일선 시군의 신규 사업에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상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대관령 식수전용 저수지 조성사업은 동계올림픽 유치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대회관련 시설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며 "물이 없어 대회 운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안은복 rio@kado.net

혁신도시 지역업체 참여 확대

이강후 의원, 법 개정안 발의

원주 혁신도시가 지역구인 이강후(새누리당·원주 을) 의원은 12일 지역학교 출신 우대와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의 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원주의 경우 혁신도시 조성공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현재 24%에 불과하다. 참여비율이 60% 이상으로 의무화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 의원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혁신도시 조성 이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박지은



부동산 시장 침체 건설사 직격탄

7개월간 246개 업체 부도·폐업처리... 공공공사 발주물량도 급감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역 건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6일 대한전문건설협회 도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도내 전문건설 업체수는 1934개로 3년새 129개 늘었다. 이 가운데 지난해 1월 부터 현재까지 경영난 등을 이유로 부도(57곳), 폐업(175곳), 등록 말소(66곳) 처리가 된 업체수는 모두 246곳에 달한다.

폐업처분된 업체들은 경영난에 면허를 자진반납한 사례가 많았다. 등록말소는 지자체가 부적격 업체에 내리는 행정처분이지만 최근 등록말소는 법정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처분받은 사례가 대부분

이었다는 게 협회의 설명이다.

특히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공공공사 발주물량도 크게 줄어 올 상반기까지 발주금액은 1530억원(2006년)으로 지난 해 같은기간 1674억원(2013년)과 비교하면 144억원이 감소했다. 발주물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2009년(2420억원)에 비해서는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도내 전문건설업체의 공사업 면허 수도 감소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도내 전문건설업체 신규 등록면허 수는 113개로 최근 2년간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10년 249개에서 2011년 146개로 줄었다.

전문건설업은 타 업종과 달리 면허 취득 등의 진입장벽이 낮아 건설경기 불황에도 업체 수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업종수의 감소현상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도내 일반건설업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까지 도내 지역 공공공사 발주액은 5882억원(1075건)으로 지난 5년간 낙찰금액이 가장 많았던 2009년(9041억원)과 비교하면 34.9%(3159억원)나 줄어 수년째 공공공사 발주액이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2분기 지역경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에서도 도내 건축착공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0%가 감소하는 등 주거용과 공공용 모두 착공면적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경기 하향세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건설협회 도회 관계자는 "공사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업체간의 출혈경쟁이 심화돼 경영난에 봉착한 상황이다"면서 "적적심사 낙찰제도 정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원도급자의 공사비가 삭감돼 하도급의 대금 결제 지연, 공사비 삭감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감을 드러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하반기 실적공사비 단가 상승

2253개 1.6%... 가격변동폭 큰 항목 재료비 분리

올 하반기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2253개 항목에 대한 실적공사비 단가가 공개됐다.

12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실적공사비 항목 수는 총 2253

개로 지난 상반기(2129개) 대비 124개가 늘어났으며 단가는 상반기 대비 1.6% 상승했다.

이 단가는 같은 기간 건설공사비 상승지수인 1.9%에는 못 미치지만

생산자물가지수(1.6%)와 동일한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토목이 1.5%, 건축은 1.8%, 기계설비는 1.9% 각각 상승했다.

또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수준이 그 단가에 포함된 재료의 가격보다 낮거나 가격변동폭이 큰 재료비를 포함한 76항목에 대해서는 실적공사비에서 재료비를 분리했다.

한편 실적공사비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현실에 부합되는 공공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국토부가 지난 2004년부터 연 2회(2월, 8월)에 갱신·공고하고 있으며, 매년 실적공사비 항목이 증가하고 있다.

박현철 lawtopia@kado.net

"원주~강릉 복선철 동해 유치 힘 보탬것"

이이재 국회의원, 전국철도노조 간담회 참석

이이재 국회의원(새누리당·동해-삼척)이 전국철도노조와 함께 원주~강릉간 복선전철 및 차량기지 동해역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이재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오전 코레일 강원본부에서 정해범 코레일 강원본부장, 강동구 전국철도노조 영주지방 본부장과 김영덕 전국철도노조 동해역연합지부장, 진진우 전국철도노조 동해전지지부장, 우덕하 전국철도노조 동해차량

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전국철도노조 관계자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원주~강릉 복선전철의 동해 연장과 차량기지의 동해역 유치가 반드시 필요하고 동북아 지중해 시대에 대비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계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동해중부선 및 동해

북부선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철도노조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에 철도가족 여러분이 앞장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김형곤

북부선의 조기완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국가의 장기적 발전과 철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국철도노조와 인식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철도를 비롯한 SOC 확충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철도망 확충을 통한 교통망의 획기적 개선에 철도가족 여러분이 앞장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 달라"고 당부했다.

동해/김형곤